

데스크 시각

지역 은행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산다



최 재 호
경제부장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면서 하나에 얽매어 좁게 보지 말라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이 말 말게 결정되는 광주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그런 말이 떠올랐다. 아마도 광주시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격언이지 않나 싶어서다. ‘행토불이’(行土不二: 은행과 지역민은 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과장된 표현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지역 주민이 은행 직원이나 은행 주인(주주)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이 돈을 맡기면 필요한 우리 이웃이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그 영업 이익은 당연히 지역 발전에 쓰임으로서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이 되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축적된 돈이 영세 서민과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지역 자금의 역의 유출을 막으니 전체적으로는 지역경제의 활력이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지방은행은 고용 창출, 금융 인제 양성,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발생한 이익을 각종 장학 사업, 문화 사

업을, 체육 사업, 복지 사업에 쓰는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익을 되돌려 주는 역할을 한다. 이와는 달리 외국 자본이 포함된 대형 시중은행은 지역 예금을 조달해 역의 유출을 시키는 데다 지역민과의 스킨십이 어렵고 전국적인 대출을 운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은행과 주민은 한 몸

광주은행은 그동안 지방은행의 고유 역할을 특특히 해 왔다. 동네 앞 어느 곳에서든 만날 수 있는 광주은행은 시도민의 친근한 이웃이다. 최근 광주은행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몇 개 점포를 정리하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것만 봐도 광주은행이 얼마만큼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지 알 수 있다.

시중은행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 엄격한 대출 잣대를 들이댔 때 지방은행은 이보다는 좀 더 편한 대면과 상담으로 도움을 준다. 대출을 해 줄 때 시중은행은 서류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지방은행은 눈높이를 맞추고 장래성까지 감안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수 있다. 은행 문턱이 낮은 것이다. 실제 2014년 하반기 민영화 이후 광주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은 지난 9월말 현재 8조881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2% 늘었다. 이는 전체 지방은행 대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방은행 평균 4.0%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 U대화나 광주비엔날레 그리고 여수 엑스포 등 굵직한 지역 개최 국제행사에 공식 후원을 했으며 90% 이상 지역 인제

를 채용하는 등 많은 바 책무를 묵묵히 다하고 있다. 이는 향토은행이라는 자부심과 의지가 없이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광주은행은 당기순이익의 10% 이상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에 환원하고 있다. 이는 여타 지방은행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시 금고 선정 얘기로 돌아가 보자. 이게 경쟁입찰이다 보니 적은 배점을 받은 은행은 당연히 탈락된다. 다만 이러한 단순 수치 비교와 서류상의 결정은 자칫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방은행의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숲)를 생각지 않고 단순히 서류심사를 통해 얻은 수치상의 점수(나무)로 탈락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다. 지역사회 기여도, 점포 수(지역), 시민 이용도 면에서 시중은행은 지방은행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없다. 전국 점포 수가 많은 것은 지역민들의 이용도와는 관계가 없다.

부산·대구·전주의 사례

평가 항목인 단순 협력사업비는 메가뱅크인 시중은행이 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 4년 동안 광주시가 굶직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당면했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 이때 도움의 손길과 이를 수용해 줄 은행은 지방은행인 광주은행뿐 아니겠는가.

시중은행은 광주 지역 점포만을 생각할 수 없다. 전국 점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자본 배분을 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지방은행처럼 지역 현안에 대해 올인할 수 없다. 이와는 달리 지방은행은 충분히 협의하고 긍정적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명분이라면 시의 요구에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김한 광주은행장은 “밖에서 벌어 지역민을 위해 쓰겠다”는 확고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 진출이라는 역발상을 통해 수도권 자금을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혁신적인 사업으로 금융계의 주목을 받는 등 은행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방은행이 있는 지자체 가운데 이미 부산, 울산, 대구, 전주는 각각 지역의 지방은행인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이 시금고에 선정됐다. 각 지자체들이 지방은행을 지역 경제의 중심이자 젖줄로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각 지자체가 지방은행을 지역 경제의 주춧돌로 여기고 기회를 부여하고 상생하고 있다. 만약 광주에서 시중은행이 시금고에 선정된다면 이는 광주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될 것이다.

내년 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경제는 말할 것도 없다. 지역경제의 젖줄인 지방은행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잘 돌아간다. 광주시 금고 선정에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과연 어떠한 결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인지 광주시의 깊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은편칼럼



송 민 석
수필가·전 여천고 교장

매년 대학입시철이 다가오면 온 나라가 후끈 달아오른다. 내일이면 수능이 끝나고, 사교육 기관의 대학입시 설명회장에 학생과 학부모가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누굴 탓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벌 지상주의’가 문제다. 학벌주의란 개인의 능력과 상관없이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 차별을 받는 사회현상이다. 일단 상위권 대학만 나오면 능력을 따지지 않고 출세가 보장되는 우리의 현실이 개탄스럽다.

오래전 일이다. 서울의 어느 사립학교에서 5명의 교원을 뽑는데 전국에서 600여 명이 지원했다. 그런데 지방대 출신자의 서류는 뜯지도 않고 그대로 버리고, 명

대학입시와 학벌주의

문대 출신 지원자 중에서만 합격자를 발표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으나 찾잔속의 태풍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러니 꼴찌를 하더라도 서울 소재 대학에 들어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아닐까. 대기업 사원에서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운동선수의 성적조차도 학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학벌이란 어느 특정 시기에 개인이 경험한 하나의 속성에 불과하다. 개인의 지적 수준이나 신체적 능력은 그의 노력과 경험의 축적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사람의 차이를 학벌이라는 잣대로 획일화시켜 서열사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지 않던 시대에는 출신학교가 한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정보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간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에는 ‘과거의 학력’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능력’이다. 끊임없이 변화되고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고 자신들만의 인맥으로 배타적인 성을 쌓는 일종의 ‘사회적 고착’ 현상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학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10대 후반에 고착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패자부활전이 없으니 승자나 패자 모두 분발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처럼 학벌주의는 사회를 정제시키고, 능력 있는 인재를 발탁할 기회마저 빼앗아가고 있음이다.

이공계 특성과 대학인 포스텍의 교육 실험 중에 교수제용 방식을 보면 파격적이다. 전임 교수 절반을 교체할 계획으로 그중 50명의 ‘산학 일체 교수’는 박사학위가 없더라도 연구 실적 등 실력만 보고 뽑겠다고 한다. 교수 사회의 고질적인 학벌·순혈주의를 깨고 실용적 산학협력을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육계의 패러다임도 대학의 간판보다는 실력 위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학벌주의를 타파하려면 능력 중심의 사회로 탈바꿈해야 한다. 이는 개성 있는 각자의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때 가능할 것이다. 전문대나 고교 졸업자도 대졸자를 앞지를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

때의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는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주어진 사회가 열린 사회라 할 수 있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른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출세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일 아니다.

공부는 수많은 재주 중의 하나일 뿐이다. 성적만으로 줄 세우는 구태에서 벗어나 특기·적성으로 여러 줄 세워 적재적소의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 이로써 명문대 졸업장이 아니라 적성을 살린 진로선택이 개개인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보장한다는 선진 교육관이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개인을 평가하는 유일한 잣대가 공부여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난여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신분제를 공공화해야 한다”는 등의 막말 논란으로 파면되는 등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사회 전반에 퍼진 승자독식의 학벌주의는 척결되어야 할 망국병이다. 출신 대학 간판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고질병을 고치지 않는 한 아무리 좋은 대학입시제도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본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칼럼’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社 說

민주당 이래 가지고 수권정당 될 수 있겠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100만 촛불’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100만 촛불’의 이면에는 제1야당이 자 수권정당을 자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기력한 모습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대표와의 영수회담 무산 해프닝은 민주당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다. 추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은 촛불 민심을 제대로 읽지도 못했고 당내 공감대도 얻지 못하면서 14시간 만에 좌초됐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조급함이 촛불 민심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물론 야권의 역량을 약화시켰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날 영수회담 무산 와중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 ‘전면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1차 촛불집회가 열린 지난달 29일 이후, 보름 만에 당론을 정한 것이다. 제1야당으로서 정국의 흐름도, 민심의 흐름도 헤아리지 못한 ‘뒷북 당론’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제1야당으로서 민심에 한 발 앞서 나가기는커녕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권 정당으로 위기의 정국을 타개할 담대한 비전을 제시, 민심을 결집해 나가기보다 촛불 민심이 차려준 밥상에 순가락만 올리려 한다는 비웃음을 사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차 촛불집회 이후인 지난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29%에서 31%로 고작 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새누리당에서 빠진(29%→17%) 민심이 민주당으로 오지 않고 부동층에 흡수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을 바라보는 냉엄한 민심이다. 촛불 정국은 기존 정치적 질서에 안주하는 민주당에 기회라기보다 위기라는 목소리가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100만 촛불의 분노를 새로운 시대의 비전으로 만들어가지 못한다면 무능한 제1야당이라는 프레임에 빠지면서 정권 교체의 길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 더 이상 미룰 이유 없다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으로 한정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변호인을 내세워 헌법정신 운운하며 조사 방법·시기 등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정 혼란의 실제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또 다시 저버렸기 때문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그 날짜는 늦어도 내일까지라고 제시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검찰이 조사 날짜를 못박은 이유는 최순실 씨에 대한 기소 시기가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최 씨의 구속 시한은 오는 20일까지다. 늦어도 이번 주 내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와 최 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져야 하고 최 씨의 혐의가 확정돼야 한다는 의미다.

수사의 초점은 최 씨가 개입한 미르

및 K스포츠 재단에 대한 자금 모금 과정에서 감암성, 대기업의 자금 출연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여기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명하 변호사는 어제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검찰이 마지못선으로 정한 조사 날짜를 거부한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라고 밝힌 만큼 대면 조사를 피하거나 미룰 이유가 없다. 대통령은 역사 앞에 선다는 각오로 검찰에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기 고



김 한 규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오늘날 사회는 이전 어떤 시대보다 쉽게 소통을 할 수 있는 시대다. 하지만, 소통의 부재를 심각하게 겪고 있다. 스마트폰에 의존하고,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더욱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지만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는 것이다.

소통(疏通)이란 ‘막히지 않고 잘 통하거나 혹은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을’ 말한다. 소통은 성공의 열쇠가 되

정청의 소통이 절실하다

기도 하고,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만큼 인간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내 것은 지키고 남의 것을 가지려 할 때, 내 마음의 문은 닫고 남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할 때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먼저 나 자신과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 마음을 열어 남을 포용해야 한다.

북아메리카 북서부 해안의 인디언 부족들은 회의를 할 때 토킹스틱(Talking Stick)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한다. 토킹스틱을 든 상대방이 의견을 말할 때는 말꼬리를 자르거나 꺾여들지 않고 상대방의 관점을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한 이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토킹스틱은 상대방에게 옮겨져 먼저 말한 상대방이 이해할 때까지 충분히 의견을 전달한다. 인디언 부족들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한 것처럼,

말의 흥수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영역’이라는 윌버 헨리 촛스의 표현처럼 우리 귀를 활짝 열어 먼저 듣기에 집중해야 한다. 원활한 소통의 첫걸음이 바로 올바른 ‘경청’이기 때문이다. 경청은 단순히 잘 듣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 그 내면의 의미와 동기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청은 상대를 존중해주는 것이다.

프랑스 파센 전문지인 ‘엘르’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잠수종과 나비’는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영화이다. 영화 속 주인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뇌졸중과 잠금증후군(locked-insyn-drome)이라는 희귀병에 걸려 왼쪽 눈과

의식을 제외한 신체의 모든 부분이 마비된다.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왼쪽 눈꺼풀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하루 종일 눈꺼풀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였다. 언어치료사의 도움으로 침묵에 빠진 육체의 한계를 이겨내며 15개월 동안 20만 번의 깜박거림으로 130페이지의 책을 저술하였다. 소통을 위한 인간 의지에 한계가 없음을 보여주며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

명나라 문인 진계유는 ‘침묵을 지킨 뒤에야 지난 날의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았네’라고 하였다. 바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말하기보다 먼저 침묵하고 경청하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평생 괴롭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귀를 통해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것이 소통을 위한 최고의 지혜가 아닐까?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 부 220-0649 정치 부 220-0632 사회 부 220-0642 사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